

2006

통일교육

일 반 용 지침서

Contents



I. 통일교육의 목표 7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3

1. 통일문제의 이해 15

- 가. 통일문제의 성격 | 15
- 나. 분단의 배경과 폐해 | 17
- 다. 통일의 필요성 | 20
- 라. 통일의 과정 | 22
- 마. 통일국가의 미래상 | 24

2. 북한 이해 26

- 가. 북한에 대한 인식 | 26
- 나. 북한의 정치·외교 | 28

- 다. 북한의 경제 | 34
- 라. 북한의 군사 | 37
- 마. 북한의 사회·문화 | 39
- 바. 북한의 변화와 전망 | 45

3. 통일환경의 이해 48

- 가. 국제정세의 변화 | 48
- 나.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 | 51

4. 통일정책과 통일을 위한 과제 53

- 가. 우리의 통일방안 | 53
- 나. 역대 정부의 노력 | 55
- 다. 남북교류협력의 증대 | 59
- 라. 통일을 위한 과제 | 64

Ⅲ. 사회통일교육의 지도방법 67

- 가. 사실적 접근에 기초한 북한사회 및 통일문제 이해 | 69
- 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의 중시 | 70
- 다. 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와 호기심 유도 | 71
- 라.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 71
- 마.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쟁점과 사례중심의 접근 | 73
- 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 74
- 사. 강의식 방법의 발전적 적용 | 77

Contents

〈부록〉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목록 | 80

현장 통일교육 안내 | 82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 | 93

남북한 교류협력 현황 | 94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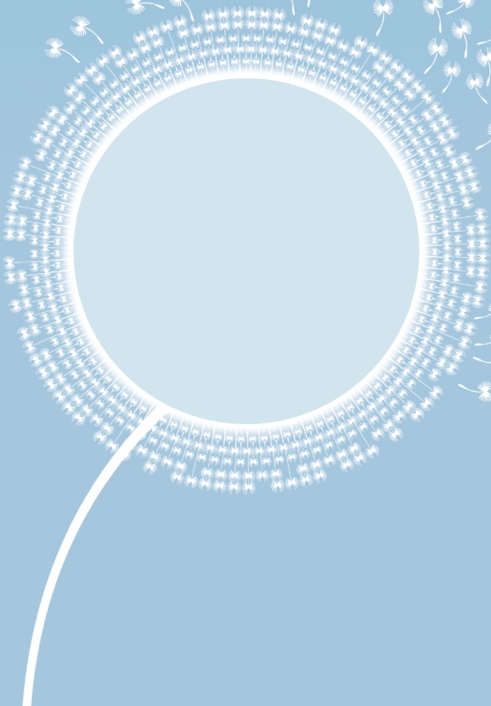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 102

통일교육원 발간교재 목록 | 103

2006

I

통일교육의 목표



I.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이러한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우리나라의 헌법이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통일 이후에도 견지되어야 할 중요한 기본가치 중 하나이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

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자아실현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사회적 포용과 배려, 남북한 사이의 다양성을 위한 관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일관되게 추구해야 할 기본가치이다.

분단의 지속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같은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던 민족의 이질화를 심화시켜왔다. 반세기가 넘는 대결과 대립은 남북간에 적개심을 키워왔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통일관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정신과 한반도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나.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변화하고 있고 남북한의 국력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통일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북한의 실상을 세계사적 추세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와 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통일정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 북한의 핵문제 등 여러 가지 안보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국가변영과 남북관계 발전의 초석

으로서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실현의지 함양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사명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 해도 이 땅에서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분명히 합의하고 있음을 일깨워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평화공존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임을 재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토대로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와 자유에 기초한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정상적인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려는 것은 역사의 순리인 동시에 우리 국민의 희망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상호간 대립 및 소모적 경쟁이 민족의 역량과 자원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치명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위축된 민족의 역량을 드높이고 국제무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통일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양시켜야 한다.

2006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 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정책과 통일을 위한 과제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문제의 이해

가. 통일문제의 성격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인해 양분되었으며, 북한의 도발에 의한 6·25전쟁은 민족구성원 상호간에 증오와 적개심을 갖게 하는 심리적 분단까지 초래하였다.

이렇게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함과 동시에 남북한간에 첨예한 대립과 경쟁이 지속되어온 지역이었다. 그래서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통일문제의 이중적 측면은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문제가 남북한간의 주도적 해결 노력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협력하면서 신뢰를 구축해야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통일에 대해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입장이 상이할 수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주변국의 관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주변국가 모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는 있지만, 주변국가들의 경우 각기 한반도의 통일이 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일차적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역사적 당위성을 띠고 있으며 주변국의 실리에도 부합됨을 주변국가들에게 잘 이해시켜 그들 스스로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결국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북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통일문제의 이중성을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이 우리 민족의 결집된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가능함을 인식시킨다.

나. 분단의 배경과 피해

(1) 분단의 원인과 성격

통일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민족이 왜 분단되었고 그 분단의 성격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뒤이은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지리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남북분단의 기원은 서구열강의 세계 분할지배와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통치로 소급될 수 있다. 이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된 한반도는 미·소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지리적 분단이 이루어진다.

남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영·소가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의하자 우익 자유주의진영과 좌익 공산주의진영은 신탁통치의 찬반 여부로 갈려 상호대립하게 된다. 결국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각 수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이 초래된다.

대한민국은 국제연합(UN)의 감시 하에 민주적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은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

년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할 때까지 국제연합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6·25전쟁으로 심리적 분단이 심화되고, 그 결과 분단이 고착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남북 민족구성원간의 증오와 적개심을 수반하는 심리적·문화적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2) 분단의 폐해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적·물질적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민족적 차원에서는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공동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분단은 대륙으로 통하는 통로를 단절함으로써 남한을 지리적 폐쇄공간으로 만들었다.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남한은 분단으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지리적 왕래가 차단됨으로써 총체적 사회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분단은 남북한간 적대적 대결구도를 지속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 속에서 조화로운 민족공동체의 삶을 펼칠 기회를 제약해 왔다.

분단은 한반도에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 형성·유지되는 데 일정하게 작용하였으며, 남북한간 소모적인 군비경쟁 등을 유발시켜 경제발전에도 많은 제

약을 가져왔다. 특히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통해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주민에 대한 정치적 억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분단은 수많은 이산가족들과 남북억류자 가족들에게 혈육과 이별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분단이 초래한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구도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한반도의 분단은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과정도 민족공조와 국제사회의 동의 및 협력 확보라는 양자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시킨다.

분단의 장기화가 오늘날 개인의 삶과 민족 전체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과 폐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일깨워 준다.



다. 통일의 필요성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한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현시킨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60여 년간의 남북분단은 민족 구성원간 상호불신, 반목 및 갈등을 부추기며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국가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재결집시키며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통일은 남북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인해 생이별을 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해소한다.

분단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남북으로 갈려있는 이산가족들이다. 남북간 분단상황에서 장기간 교류와 왕래가 두절된 채 고통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중차대한 과제이다. 통일은 무엇보다 먼저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해 줄 것이다.

통일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번영의 중심국가로 이끈다.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경제권을 형성시킴으로써 내수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남북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보완성을 높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남북이 통합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

북아시대의 번영을 주도할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해소시키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불안한 정세는 남북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지역의 불안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이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분단으로 인하여 나 자신과 우리 민족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가, 통일이 나와 우리민족에게 가져다 줄 편익은 무엇인가를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인지시킨다.

통일의 필요성을 학습자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방법을 활용한다.

라. 통일의 과정

통일은 남북간 상호 이해,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정착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룩해야 할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민족생존 및 번영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다. 그러나 그것을 단기간에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분단 상황을 평화적·통일 지향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신뢰를 쌓아갈 때 한반도의 평화공존은 자연스럽게 이룩될 수 있다.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경제교류를 넘어서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의 영역을 포함한 관계발전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남북간 평화공존은 안정적인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와 함께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

상호신뢰구축과 새로운 민족정체성 형성을 위한 내적 조건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내부의 원동력으로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과거 냉전적 사고에 바탕을 둔 적대적 시각에서 벗어나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가는 미래지향적·진취적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은 통일의 외적조건으로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안보위협을 해소할 통해 남북한 사이에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상호 안심할 수 있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정립에도 노력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남북간 경제력 격차, 체제의 차이와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당장의 통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음을 이해시킨다.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도 점진적·단계적 통일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남북간의 상호협력과 공존공영관계를 도모하는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제시된 남북연합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마.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한국은 남북한 구성원간의 이질감이 완전히 해소되고 통일의 결실이 모든 이에게 공유될 수 있는 진정한 민족공동체 국가를 가져다 줄 것이다.

통일 이후 남북한 사이에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 경제력 격차, 사회·문화적 가치 및 관습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남아있을 것이다. 통일국가는 이러한 남북간 격차와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하나의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한국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구성원이 통일의 결실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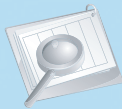
통일국가는 분단으로 인한 민족구성원 모두의 고통과 불편이 사라지고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며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어야 한다. 또한 풍요로운 경제를 기반으로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신장시킴으로써 그 혜택이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국가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분단으로 인한 억압적 구조를 타파하여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국가를 지향한다.

통일한국은 남북간 군사적 대립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된 사회로서 다가올 동북아시대를 선도하고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주역국가 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은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을 통해 아시아 대륙 및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열린 공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통일국가의 실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통일국가의 실현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북한 이해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의 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화해·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부문의 실상을 객관적이고도 균형있게 이해해야 한다.

가.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며 동시에 안보의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상대이기도하다는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만 주목할 경우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통일의 동반자라는 당위론적 인식만 강조하게 되면 남북관계의 현실을 경시하는 통일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일부이기는 하나 분단 이후 사실상 우리와는 독립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남북한간에는 법적·체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이런 차이에 대해 예단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분야를 중시하고 다른 분야는 경시하는 등 편향적 이해가 되어서도 안 된다. 즉, 정치적·체제적 측면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도 병행하여 이해함으로써, 북한사회에 대한 종합적·균형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이해는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을 이해함으로써 북한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신뢰를 통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가 함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이해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분단현실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이해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은 통일의 동반자이며 또한 현실적 위협이라는 이중성을 이해시키고,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에 목표를 두고 남북한 상호간 편견과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북한의 정치·외교

(1) 북한의 정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의 체제이념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체제의 모든 부문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헌법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으로서, 상황에 따라 내용을 수정해 온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특히 수령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조선민족제일주의, 선군정치사상 등은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체제 및 지도자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시된 대표적 하위이론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이며, 국가권력이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된 중앙집권체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집단주의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하여 수령(지도자)이 모든 명령을 내리며, 당은 수령의 명령을 받아 이를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수령-당-대중의 획일적 체제로 되어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조선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핵심이다. 북한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이 있지만, 이들의 존재는 형식적이며 조선노동당이 유일한 지배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입법기관(최고인민회의), 행정기관(국방위원회, 내각), 사회안전기관(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재판검찰기관(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은 당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하위기관과 인민을 지도·감독한다.

1998년 9월의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명목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영남)이 국가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 국가 최고의 직책은 국방위원회 위원장(김정일)이다. 행정경제사업은 당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내각(총리 : 박봉주)이 관장한다.

북한은 통치방식으로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선군(先軍)정치란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이 체제위기를 맞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원이 군대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국방문제는 물론 경제건설 및 사회통제에도 군이 동원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의 체제이념과 권력구조 등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을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의 논리에 따라 설명하고, '선군정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북한의 대외정책

북한은 체제의 유지 발전과 한반도 공산화통일에 필요한 국제적 여건조성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은 체제생존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대외원조를 도모하는 등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문제 등 현안문제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10월 조명록 특사를 미국에 파견하여 북·미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 등 대미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 '핵 프로그램의 가동'을 시인하면서 2차 핵문제가 대두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 해

체(CVID)' 해야 하며,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에 대한 자위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선적으로 미국과 불가침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자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2003년 8월, 2004년 2월 및 6월에 열린 3차례의 6자회담에서 미·북 양측이 기본적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은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다행히 2005년 9월에 개최된 제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일부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으나, 공동성명의 해석 및 구체적 이행절차를 둘러싸고 이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은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평양선언'을 발표하고 과거사 청산과 납치문제 해결, 경제협력 등을 시도했다. 2004년 5월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일본인 피랍자 송환 등 '평양선언'의 이행을 통한 국교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

정상회담 이후 요코다 메구미 유골의 진위 문제가 불거져 북·일 관계가 또 다시 냉각기로 접어들었으나, 북한은 2006년 2월 베이징에서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교회담에 임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 ● ●

압박정책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다방면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중 관계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소강상태를 면치 못했으나 2000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2001년 장쩌민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관계가 개선되었다.

2003년 이후 중국은 교착상태에 빠진 핵문제 해결에 노력했으며 6자회담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05년에는 6자회담에서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북·미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06년 1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하는 등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증진하면서 교류 확대를 통한 실리획득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진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해 대러시아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24일간 러시아를 방문한데 이어 2002년에도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러시아측에서는 2004년 7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남한도 병행 방문)하여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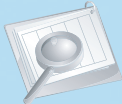
북한은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수교 등 외교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수교하고 대표단을 초청

하는 등 유럽 국가들과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와의 수교관계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1월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호주, 필리핀, 영국, 독일 등 20개 국가들과 새롭게 수교하였다. 그러나 2002년 7월부터 북한과 EU 및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북핵문제로 인해 소규모의 경제협력 외에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제3세계 국가와도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4년에는 몽골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쿠바와의 관계도 비교적 활발히 진전시키고 있는데, 북한과 쿠바는 2004년 군사·경제·정치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양국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그 외에도 2004년 각각 콩고, 모잠비크, 인도네시아의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의 대외정책이 체제생존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실리추구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인해 대미·대일 외교가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서방외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다.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생산성 저하와 경제부
문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적 민
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의 군산(軍産)복합체 경제운용을 추구해 왔다. 그러
나 개인의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었다.

북한경제는 내각에서 관리하는 민수경제(제1경제)와 군부에서 관리하는 군
수경제(제2경제)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경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
으로 추정되는 군수경제가 자원배분에서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민수경제부문
은 자원부족과 분배의 왜곡을 겪고 있다.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으로 경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모순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에너지 및 식량 부족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겪고 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며, 1999년에야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2004년도 북한의 명목 GNI는 약 208억 달러로서 남한의 1/32.8에 불과하
며, 1인당 GNI는 약 914달러로서 남한의 1/15.5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주민
들은 '장마당'에서 거의 대부분의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다. 장마당은 당국에
의해 묵인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암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장마당에서의 거래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가격이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매월 받는 통상적인 임금으로는 원하는 물자를 제대로 조달하기 힘든 상황이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신의주·개성·금강산특구를 지정·발표하는 등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헌법에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거의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자”라는 ‘신사고’와 정보기술(IT)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경제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발표하면서 경제관리방식에서의 효율성 및 수익성에 기초한 실리주의에 중점을 두고, 생산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노무관리 개선, 개인경작지 확대, 식량·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폐지, 가격·임금의 대폭 인상, 환율 조정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2003년에는 부분적이긴 하나 평양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시장이 도입되었다. 과거 북한에는 ‘농민시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쌀을 제외한 농산물의 거래만 허용되었고 시장이 열리는 장소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시장에서는 공산물의 거래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종합시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 발표하고, 2002년 10월과 11월에는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남한기업의 전용공단 조성을 위해 각각 금강산과 개성을 특구로 지정하였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초대 장관을 임명하는 등 의욕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의도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부터 시작되었으나 2002년 ‘금강산관광지구법’이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고, 2003년 9월 육로 관광이 시작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개성공단 건설사업도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이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하면서 활성화 되었으며, 2004년 말에는 2만 8천 평의 시범단지가 조성되어 2005년 하반기 현재 본단지 1단계 24개 업체가 분양되었고, 잔여 부지공사도 완료되었으며 2단계 개발을 조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경제의 기본구조인 사회주의계획경제와 기본노선인 자립적 민족경제 그리고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이 지닌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및 신의주·개성·금강산 등 북한의 개혁·개방조치 상황 및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라. 북한의 군사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에 따라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북한은 1962년 전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래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은 117만 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30%를 예비병력으로 동원하는 등 병력보유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국민총소득(GNI)의 30% 이상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휴전 후부터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등 군수산업의 발전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은 일부 전자 및 정밀유도무기,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등 각종 전략무기를 개발 배치하여 독자적인 전쟁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들어 악화된 경제사정은 전투력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즉, 각종 군사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수품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비의 현대화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군사력의 전진배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부족한 전투력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사회가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자위국방의 원칙에 의해 군수산업을 발전시켜 왔음을 설명한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마. 북한의 사회·문화

(1)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생활

북한주민의 규범적 가치관은 평등주의와 집단주의이다.

북한은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체제로서 토지·자본·공장 등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집단화해 왔으며,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등 주민들에게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해왔다.

또한 헌법 제63조에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북한주민은 자신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주민의 가치관은 사회주의적·집단주의적 가치관에서 자본주의적·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규범적 가치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약화되고 있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고 있으며, 배급제 등 사회제도의 모순에 대해 이해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동지애와 의리보다는 금전적 인간관계가 발달하고 있으며, 돈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남한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이 이전에 비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남한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주민은 남한주민을 ‘혈벗고 굶주린 불쌍한 동포’ 혹은 ‘미제의 압제에 시달리는 해방의 대상’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문화적 거부감이 줄어들고 더불어 살아갈 대상 혹은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드라마를 보는 북한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가 동아시아에서 호평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주민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여행을 제한해 왔으나, 최근에는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소통도 과거보다 원활해지고 있다.

북한주민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비교적 사회가 안정되었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주지를 떠나 여행을 하는 북한주민은 소수에 불과 했다.

그러나 최근 통행증 발급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무허가 여행을 하는 주민이 늘어나는 등 주민의 유동성이 높아졌다. 무단여행이 묵인되는 경향이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사회로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지만, 최근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남녀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 남존여비의 가치관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은 밖에서 일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집안일도 거의 도맡아 할 정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여성의 지위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이 직장에 출근하여 공식 노동(업무)에 종사하는 반면, 여성들은 출근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여성의 수입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의 발언권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주민의 규범적 가치관(북한당국에서 의도한 가치관)과 최근의 실천적 가치관(실제생활을 규율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하고, 실천적 가치관의 변화배경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가정생활과 여행 등 북한주민의 일상적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일상생활의 변화가 북한사회의 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탐색해 보도록 한다.

(2) 북한의 교육

북한의 교육목표는 공산주의적 인간관을 갖춘 혁명투사의 육성이다.

북한 헌법 제43조는 교육의 목표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해야 하는 등 공산주의적 인간관을 갖춘 혁명투사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행정은 당, 내각, 그리고 학교 등으로 구성되는 3원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교육제도의 큰 특징은 노동당의 통제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당은 교육과 관련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하급 당위원회와 내각에 지시한다. 행정적·실무적 업무는 내각의 교육성이 담당한다. 교육성은 보통교육부와 고등교육부가 있다.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소학교,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정치사상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에는 컴퓨터교육 등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21세기를 정보산업시대로 규정하면서,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학교 수학시간의 상당 부분을 컴퓨터교육에 할애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을, 2002년에는 김책종합대학에 정보과학기술대학과 기계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하였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에 법률대학을 설치하고 평양외국어대학의 영어과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 개방에 대비하는 교육도 중요시하고 있다.

세계화·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하고 북한사회가 실용주의화 되면서, 이공계나 국제무역 등 실용성 있는 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의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시킨다.

최근 세계화·정보화 등 세계적 변화추이에 부응하여 북한이 교육분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3) 북한의 문화

북한은 문화를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하는 등 목적주의 문예관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문화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주민들에게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주입·확산시키고 노력동원을 고무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치자(수령·장군)에 대한 정당성과 충성심을 확보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남한을 적화통일시키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의 문예이론은 주체문예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낡은 것(봉건 잔재)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하는 투쟁’, ‘착취계급과 자본주의의 모순 폭로’, 그리고 ‘사회주의의 옹호’를 의미한다. 민족적 형식이란 전통적인 민족문화의 형식이나 전통양식의 현대적 재조명이 아니라, 김일성이 항일유격대 시절에 창작했거나 지도했던 형식을 의미한다.

사상성을 강조해 온 북한의 문학작품은 최근 일상적 내용과 흥미를 유발할 만한 요소를 가미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문학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다루거나 유머 등 간단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예술>은 유머란을 신설하고 손을 씻고 피아노를 치라는 아버지에게 “안 씻어도 돼요. 난 새까만 건반만 치겠어요”라고 답하는 딸의 이야기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남한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황진이>는 남녀간 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등 북한의 전통적 문예관에 비추어 볼 때 파격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 문화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설명하고, 남한의 문화정책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이해시킨다.

북한의 문학작품 중 사상성보다 흥미에 초점을 두면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창작된 작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바. 북한의 변화와 전망

북한은 2000년 이후부터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의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존전략 차원에서 점차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2001년 이른바 ‘신사고’ 캠페인을 통해 의식전환, 기술개혁, 산업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였다.

2002년에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하고, 기업소 경영의 자율성과 사경작지 확대, 배급제의 폐지, 가격·요금 인상 및 임금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003년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시장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1년부터 나선경제무역지구를 개방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방지역의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2002년에는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그리고 신의주행정특구를 설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특히 2005년에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여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적극 개선·복원하였으며, 대외경제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을 채택하는 등 외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정비하고 있다.

북한의 근본적 개혁·개방문제는 체제안전 및 최고지도자의 권력유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이 완전한 개혁·개방을 할 경우 우려하는 바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이다. 첫째는 주민통제의 문제로서, 모든 주민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할 경우 북한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힘들 것이다.

둘째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으로서, 북한주민이 남한과 통일을 원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힘들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양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셋째는 국제사회와의 관계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인권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북한 지도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관심을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2003년과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 바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담할 특별보좌관을 임명하는 등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 중국을 비롯해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도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04년 10월부터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발효되었고, 2005년에는 처음으로 UN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북한은 전면적 변화보다는 점진적·단계적 변화를 선호하고 있다.

북한의 지도부는 개혁·개방을 할 경우 경제가 회복되고, 이에 따라 사회안정 및 지도자의 정당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완전한 개혁·개방은 체제 및 최고지도자의 권력유지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도부는 점진적·단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실태를 알아보고 근본적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도록 지도한다.

개혁·개방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보도록 지도한다

3. 통일환경의 이해

가. 국제정세의 변화

오늘날 국제사회는 냉전시대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안정 요인들을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경제적·사회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정치체제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새로운 안보문제들이 국가와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가간 무역장벽을 없애고 시장경제를 확대하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 속에서 각국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아세안(ASEAN)+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기존의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안보협력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강대국간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냉전시대에는 잠재되어 있던 종교·인종·민족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테러·계렬라전·정보전과 같은 비전통적 형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한반도 통일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세계적 추세는 동북아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냉전시대에 적대적 경쟁관계에 있던 국가들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분단 이후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소련과 1990년 국교를 수립한 데 이어 1992년에는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하는 등 구공산권 국가와 정치적·경제적·문화적·군사적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향후 이들 관계의 진전을 예상케하고 있다.

주변 4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문제에 대해 사안별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자국의 실리 도모를 위해 상호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동북아지역의 미래구상과 관련해서는 서로 견제하고 있으며, 미·일간의 안보 협력에 대해 중·러는 전략적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주변 4국은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상황변화 및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각각의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 변환,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한편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 보다는 안정을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미국과의 대한반도 정책공조에 치중하는 한편 대북 직접교섭의 가능성도 간헐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 극동지역 지하자원개발 등 남한과의 경협확대 노력과 과거 구소련시절의 대북영향력을 복원하기 위한 대북외교를 병행하는 등 대한반도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국제질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한반도문제가 동북아 및 국제환경과 연계되어 있음을 주지시킨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주변국들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 시킨다.

나.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의 성격과 내용도 변화한다.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는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동맹의 발전, 지역협력 강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조정이라는 새로운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협력적 자주국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 등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일본은 물론 과거 냉전시대에는 대결적 관계에 있던 중국·러시아와도 보다 긴밀한 협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통일환경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과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킨다.

우리는 균형적이고 유연한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 4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당면과제인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실현시켜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 공동번영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는 통일환경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통일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한다.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유지를 위해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남한과의 평화공존의 필요성 인식 및 미국·일본 등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 및 대외관계 개선노력은 남북한 교류협력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회와 도전요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토대로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변화된 통일환경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길임을 이해 시킨다.

4. 통일정책과 통일을 위한 과제

가. 우리의 통일방안

참여정부는 1989년 이후 보완·발전시켜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기초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남북연합단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적 통일체제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기 대외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처 등 공동의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통일국가 완성」 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체를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통합을 실현하는 단계로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단계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

를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

남과 북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서로의 통일방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처음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공식 언급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도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연합제 통일방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 국가 완성」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를 밟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경로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우리의 통일방안을 북한의 통일방안, 특히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비교하고,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 이해시킨다.

나. 역대 정부의 노력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정부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대북정책의 목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1971년 8월 우리측의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인도적 분야에서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남북 고위당국자간에도 비공개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제4공화국 정부는 1973년 6월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정부는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2월에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 편지교류 및 상봉,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지 개발 등을 포함한 20개항의 구체적 시범사업 실천을 제안하였다.

특히 1984년 9월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제의를 우리측이 받아들임으로써 같은 해 11월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고,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

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 '7·7 선언'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남북대화 및
전향적인 북방정책을 추진하였다.

1988년 2월 출범한 제6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
표하였다. 여기에서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제안하고 통일의 원칙으로
서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제시하였다.

특히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를 계기로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국
제환경에 영향을 받아 1990년 9월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한의 총리를 수
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 1992년 2월에 역사적
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1993년 2월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 대화를 모색하였으며, 이전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다
발전시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93년 3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선언으로 긴장이 고조되었고, 남북관계도 위기국면
으로 치달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7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
키로 하였으나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현실적으로 통일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
선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북화해협력정책' (일명 '햇볕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2000년 6월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통일문제,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기수문제, 경제협력, 당국대화 및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에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재개되어 실질문제를 협의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분야별 남북대화를 개최하여 실천 과제들을 합의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폭을 점차 넓혀가게 되었다.

또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상봉, 부산 아시안게임 및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측 선수단 참가 등 다방면에 걸쳐 남북간 교류협력이 크게 증대하였다.

2003년 2월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평화변영정책’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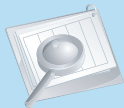
이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을 이룩하려는 장기적인 국가발전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변영정책은 ① 한반도의 평화증진, ②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원칙으로 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 남북 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목표와 추진원칙에 따라 북한 핵문제 등 당면한 안보위기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 균형적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한·미동맹에 기초한 협력적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참여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병행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의한 해결이라는 3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관련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핵포기에 합의하면 송전방식에 의해 200만 kW의 전력을 북한에 제공할겠다는 '중대제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6자회담에 참여시키고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었다. 2005년 9월에 개최된 제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폐막에 앞서 공동성명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중대제안은 북핵문제 해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남북간 적대와 갈등구조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이해시킨다.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회담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지도한다.

다. 남북교류협력의 증대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하여 왔다.

(1)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2000년 제1차 및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내용에 따라 2000년 9월 우리측 지역의 공사를 위한 기공식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왔다.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공사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철책을 걷어내고 지뢰를 제거하였다.

경의선 철도의 경우 우리측 지역은 2002년 말 완료하였으며, 북측도 본선궤도부설을 완료하였다. 동해선 철도의 경우, 2005년 12월말 현재 우리측 구간의 노반공사를 완료하고 기타 궤도부설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북측도 본선궤도 부설을 완료한 상태이다.

경의선 도로는 2003년 10월말 우리측 구간이 완성되었고, 북측도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출입사무소(CIQ)의 청사신축을 마치고 2006년 1월 23일 업무에 들어갔다. 동해선 도로의 경우는 2004년 10월말 우리측 구간이 완성되었고 북측도 포장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곧 부대시설이 완료되면 개통식을 갖게 될 예정이다.

(2) 금강산관광

금강산관광사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리활동의 일환이겠지만,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비교적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의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이 제한적이었던 때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남북간 교류의 한 획을 긋는 상징적 사업이기도 하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해로를 통해 관광이 시작되었으나, 2003년 9월부터는 육로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객은 2005년 6월부로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05년 12월말 현재 1,155,244명에 달하고 있다.

(3) 개성공단 개발사업

개성공단의 위치는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이며, 면적은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하여 총 2,000만평에 이른다.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될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2007년까지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2004년 말 시범단지 2만 8천 평을 조성하여 관련기업에 분양하였다. 그리고 2단계와 3단계 개발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지역 분업체제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2005년 12월말 현재 시범단지에 입주한 전체 15개 업체 중 11개 기업이 제품 생산단계에 이르렀고, 남측 500여명과 북측 5,400여명이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1단계 100만평의 부지조성공사는 약 64%의 종합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4) 교역의 확대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에 장애가 되어온 법률적·제도적 보장과 관련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해결, 청산결제 등 4대 경제협력 합의서가 발효(03. 8)되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1989년 1,872만 달러 규모로 시작된 남북 교역은 2002년에 6억 4천만 달러, 2003년에 7억 2천만 달러, 2004년에는 6억 9천만 달러, 2005년에 10억 5천만 달러(12월말 기준) 규모로 증대되었다. 남북 교역과 경제협력에 참여한 업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되는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5) 사회·문화 교류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는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급격히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문화분야의 남북협력자는 1999년까지 18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 12월말 현재 78건으로 증가하였다. 내용면에서도 문화, 예술, 체육, 방송, 학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으로 폭이 넓어지고 있다. 교류도 정례화 되어 3·1절, 6·15, 8·15, 10·3(개천절) 등은 ‘4대 민족행사’로 정착되었다.

특히 2005년에는 ‘6·15 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여 평양에서 개최된 축전에 우리측 민간 대표단과 당국이 공동으로 참가하였고, 광복절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공동행사에 북한당국자도 참가하는 등 사회·문화 교류는 정부간 접촉의 유효유가 되고 있다.

남북간의 교류분야가 이산가족, 문화, 예술, 종교, 체육, 관광, 언론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북한을 방문한 남한주민은 2000년 7,280명, 2001년 8,551명, 2002년 12,825명, 2003년 15,280명, 2004년 26,213명, 2005년 87,028명(12월말 기준)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은 2000년 706명, 2001년 191명, 2002년 1,052명, 2003년 1,023명, 2004년 321명, 2005년 1,313명(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산가족교류는 생사확인, 서신교환, 그리고 상봉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주체에 따라 민간차원과 당국차원으로 나누어진다. 2005년 12월말 현재 민간차원에서는 생사확인 3,598건, 서신교환 10,231건, 제3국 상봉이 1,535건, 그리고 방북상봉이 26건이다. 당국차원에서는 생사·주소확인 28,565명, 서신교환 679명, 상봉 11,788명, 그리고 화상상봉이 762명이다.

특히 당국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0년 이후 성사된 것이다. 2005년에는 8·15를 기해 화상상봉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이 금강산지역에서 착공됨으로써, 이산가족 교류에 새 장을 열고 있다.

한편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에 따라 남북간 사람과 물자의 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남북출입사무소가 2003년 11월에 개소되었으며, 2005년에는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설치되었다. 남북출입사무소의 설치와 남북관계 진전의 뚜렷한 징표일 뿐 아니라, 실제로 육로를 통한 남북한 주민의 통과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설치된 것은 남북한 직원이 상시적으로 만나면서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6) 인도적 대북지원

정부와 민간단체는 경제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1995년 북한에 대해 처음으로 지원을 시작한 이래 북한에 제공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2005년 12월말 현재까지 약 13억 7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 중 정부차원의 지원이 약 8억 6천만 달러이며, 민간차원의 지원이 약 5억 1천만 달러이다. 2004년에는 용천복구 지원으로 700억원 상당(수송비 포함)의 물자를 지원해 준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차관형식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원 물자는 식량(쌀)이다. 대북식량차관으로 2000년에 태국산 쌀 30만 톤과 중국산 옥수수 20만 톤 등 50만 톤을 지원했으며, 2002년과 2003년에는 국내산 쌀 40만 톤, 2004년에는 국내산 쌀 10만 톤과 외국산 쌀 30만 톤 등 40만 톤, 2005년에는 국내산 쌀 40만 톤과 외국산 쌀 10만 톤 등 50만 톤을 지원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남북간에 어떠한 교류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남북 교류협력이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사업이 궁극적으로 남북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평화적 통일기반을 닦는 데 기여할 것임을 이해시킨다.

라. 통일을 위한 과제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감과 동시에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냉전구조의 잔재인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인적 교류와 물적 교역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공영의 협력자'로 보아야 하며,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바탕이 된다.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과의 적극적 화해협력을 통하여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남북한 사회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 함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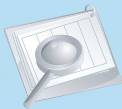
남북간 이질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물리적인 통합은 큰 혼란과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다. 남북한 간에는 심각한 경제력 격차가 존재한다. 경제총량에서 2005년 현재 남한이 북한을 30배 이상 앞서고 있으며, 기타 사회간접자본과 남북간 소득수준의 격차도 현격히 벌어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일이 되기 전부터 점차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며,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남북간 문화적 차이는 반세기 동안 체제와 이념이 다른 사회에서

상호 교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그동안 북한도 많이 변했지만 우리도 많이 변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것임을 명심하고 모든 국민이 통일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통일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임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권리이다. 국민 개개인이 비록 통일과 관련된 일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통일은 곧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노력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국민 개개인의 주인의식이 결집될 때 우리의 통일역량이 강화되어 통일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한 노력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개인적 판단과 결정이 중요하며 지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겠지만,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국가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민족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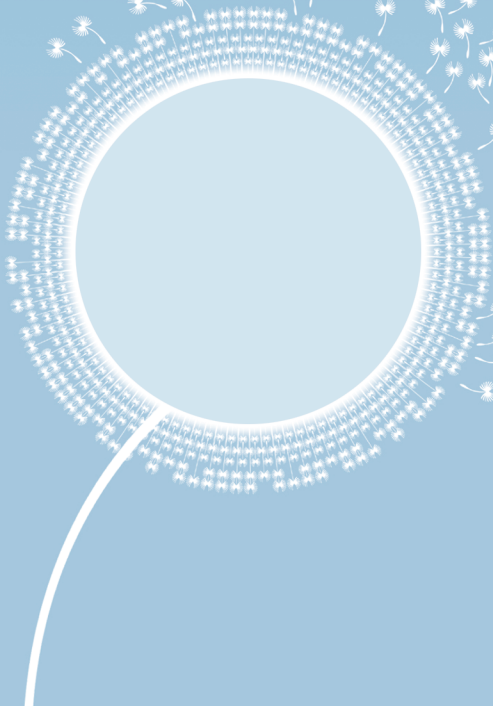
통일문제에 대한 개인적 결정과 행동은 권리일 뿐 아니라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특정한 행동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



2006

III

사회통일교육의 지도방법



Ⅲ. 사회통일교육의 지도방법

통일교육의 효과는 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지도방법 즉,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가르치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가 잘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도방법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통일교육의 지도방법은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 사실적 접근에 기초한 북한사회 및 통일문제 이해

사회통일교육은 북한사회와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학습자들이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판단과정,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 등이 통일교육방법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이 기존에 주입된 선입관을 기초로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사회와 주민의 생활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북한주민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외형적 모습보다는 실제적 삶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고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을 마치 북한의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은 과거의 냉전시대 속에서 형성된 선입관이나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면서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파악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그 사회와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남북의 이질적 측면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동질성 회복의 길을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의 중시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의과정을 통해 타인의 의견 및 권리 존중, 의사 경청기술, 협상능력, 합의 도출기능 등과 같은 민주적인 의사결정능력과 태도를 배운다. 통일은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립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 나가야 하므로 개인적·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통일환경과 남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의를 통해 학습자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점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은 스스로 통일 및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합의형성 방법과 갈등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다. 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와 호기심 유도

교수자는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과 소재를 중심으로 학습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예컨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배급제 부활’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실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나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와 6자회담’을 주제로 하여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다룰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가지고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주체사상에 대해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통일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학습주제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는가” 혹은 “통일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분단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라.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사회통일교육의 학습자들은 학교통일교육과 달리 다양한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통일교육은 그 성격상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한국전쟁에 참여했거나 경험한 세대인 경우가 있고, 전후세대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도 있다. 아울러 일반 기업의 직장인인 경우도 있고,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이나 사회교육기관의 관계자, 주부, 직장여성 등 다양한 학습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통일성에 기초하되 학습자의 지적수준과 기능적

특성에 맞추어 차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통일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측면은 모든 학습자들에게 공통되는 사항일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역사 전반과 미래에 있어 통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일반론을 통해 통일의지를 고양시키는 과정은 세대별, 직종별, 성별 차별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통일교육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학습자의 직업, 전문성, 계층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교사들의 경우는 담당하는 교과에 맞추어 통일교육에 접근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는 금융분야, 노동분야, 전력분야, 농업분야 등 직능적 특성에 맞추어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자신의 직무에 도움을 주면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북한이해를 통해 통일준비 태도를 고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활동을 강조하거나 북한사회의 생활문화에 대한 체험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북한주민 돕기운동’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을 강조하거나 북한주민의 인권을 강조하는 인권교육 등과 같은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습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쟁점과 사례중심의 접근

사회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어느 정도 지식이 성숙되어 있고,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보를 언론 매체나 기타 교육에서 얻고 있는 일반 국민을 학습대상으로 하는 학습과정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통일교육에서 중요시해야 할 점은 원론에 기초한 각론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안으로 부상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방법도 중요하다.

예컨대 남북관계의 변화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정하여 교육을 시작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원론에 기초한 각론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같은 주제로 교육을 시행할 경우에도 역사적 나열이나, 교과서적인 항목별 비교보다는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선정하여 다루는 것이 더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사회통일교육은 가치규범적인 원론 중심의 논의보다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는 북한을 이해하는 데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이해와 화해를 위한 좋은 범례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원론적인 정보의 나열보다는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를 원용하는 교육방법은 학습자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로 이끌어 간 사례나, 분단국의 교류·협력사례와 통일사례, 우리 역사상 나타나는 통일사례와 현재에 주는 시사점, 남북한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나타났던 긍정적 및 부정적 사례, 일상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중심의 접근은 학습자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아울러 기존의 경험사례들에 대한 범례학습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최근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는 에듀테인먼트(Eduainment)형 통일교육으로서 여기에는 게임, 퍼즐풀이, 퀴즈, 민속놀이 등이 포함된다.

둘째로, 과제분담학습(Jigsaw), 보상중심협동학습(TGT : Teams Games Tournaments), PMR(Plus Minus Reconstruction), 이슈중심 접근법, 프로젝트수업, 신문활용교육(NIE : Newspaper in Education), 이야기 구연(Story-telling), 마인드맵(Mind map), 딜레마 토론 등을 포함하는 구성주의적 통일교육모형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통일교육으로서 비디오와 같은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거나, 북한 예술 및 아동영화를 활용한 통일교육방법이 있다.

넷째로, 가상체험 학습을 활용한 통일교육방법으로서, 북한 풍물·인문지리 등의 가상체험, 문화이해지, 북한 가계부·용돈 사용계획 쓰기, 역할놀이, 평화공원·통일공원 만들기, 통일한국의 상징 만들기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로, 현장체험학습을 활용한 통일교육에는 통일캠프, 통일관·전방 등

의 견학 학습, 백일장·공연·문화체험 등으로 기획된 축제형태의 통일교육이 있다.

여섯째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통일교육방법으로 ICT 활용 통일교육이 있다. 여기에는 웹 자료, VOD, CD 등을 활용한 통일관련 정보 안내하기, 웹서핑, 웹도우미를 활용한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정보검색·분석하기, 웹토론을 통한 통일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능력 증대하기, 웹게시판을 활용한 통일관련 경험 공유하기, 웹출판을 활용한 통일신문 만들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생활문화 체험하기, 플래쉬 또는 동영상을 활용하는 통일교육 등이 포함된다.

현재 통일관련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특히 14강 이상의 시간배당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주로 강의식 교육방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강의법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교육환경의 측면이나 교육효과 면에서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다만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태도와 참여를 위해 시청각 및 질의응답, ICT 활용, 브레인스토밍, 게임, 퍼즐풀이, 퀴즈, 과제분담학습(Jigsaw), TGT, PMR, 이슈중심 접근법, 프로젝트수업, 신문활용교육(NIE), 이야기 구연(Story-telling), 마인드맵, 딜레마 토론 등을 가미하여 능동적인 수강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시간이 비교적 단기간일수록 문화이해지와 같은 가상체험학습을 적용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의 초청강연이나 대담을 통한 가상체험학습을 원용하여 교육에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북한 풍물·인문지리 등 가상체험, 문화이해지, 북한 가계부·용돈 사용계획 쓰기, 역할놀이, 평화공원·통일공원 만들기, 통일한국의 상징 만들기 등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들

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심도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4시간 이상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비롯한 여러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장소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둔다. 지방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지역 인근에 있는 현장체험학습장을 선정하여 이루어지게 한다.

아울러 여기에 보다 직접적인 삶의 체험으로서 남북한 사람들 간의 삶의 연습형태인 가상체험학습과 수련활동 형태의 직접체험학습 방법을 혼용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지도방법은 학습자들이 남북한의 분단현실을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통일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행동 지향적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통일교육은 일회성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해 내면화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할 때 사회통일교육은 듣거나 학습한다는 고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과 관계된 삶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사회만의 고유한 축제나 관습에 연관시켜 즐길 수 있는 통일축제를 구성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일문제를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성인만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가족단위로 참가함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남남대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사. 강의식 방법의 발전적 적용

현재 사회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통일교육, 특히 공공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방법은 일방적인 강의식이며, 2시간 내의 교육에서 약 20~30분 정도 토론 또는 대담시간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은 1~2시간 배당의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공공 교육기관이나 산업교육 연수기관에서의 통일교육방법은 강의식 방법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강의식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보다 요구된다. 즉 강의식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시청각 및 질의응답, 브레인스토밍, 직소우, 분임토의, 마인드맵(Mind map) 등을 가미하여 능동적인 수강자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강의식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북관계에 있어 최근 현안사례나 교류협력사례, 일상생활사례, 해당업무 관련사례 등을 통해 다루려고 하는 해당 주제에 접근하고(50%), 이를 기초로 해당 강의주제와 관련된 핵심내용을 전달하며(25%), 끝으로 해당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통일준비를 위한 주도적 탐구를 행하는 과정으로 진행(25%)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한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교육의 경우는 보다 수강자층의 직종에 맞추어 현재의 직무에 도움이 되는 한편, 자신의 직종과 관련되는 북한

의 이해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한다. 이때 해당 부문에 대한 실증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사회에서 해당 부문에 종사했던 북한이탈주민을 초빙하여 수강자들과 대담 형태의 교육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심화된 지식을 기초로 통일준비와 관련된 자신들의 준비과제 탐구는 수강자들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이를 위해 분임토의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적 글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교사들의 경우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작성해보고 평가받음으로써 수강자의 자기주도식 학습을 유도하고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교육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